

여성정책 국내동향

Vol. 40 2018. 09.01 ~ 09.15



주요 현안



국가직 본부 과장급 16.4%, 공공기관 임원 14.3% 등 5개 부문 여성 비율 2018년도 목표 조기 달성


▶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의 2018년 상반기 추진 실적 점검결과, 국가직 본부 과장급 16.4%, 공공기관 임원 14.3% 등 5개 부문 여성 비율 2018년도 목표 조기 달성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9.04.

주요 내용

목표를 조기달성한 부문의 여성참여율 추이



국가직 과장급공무원

('12년) 9.3%


→

('15년) 12.1%

→

('18년上) 16.4%

※ '12~'15년까지 4급이상 공무원, '18년 본부과장급(4급이상)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12년) 9.9%

→

('15년) 11.6%

→

('18년上) 14.6%



공공기관 임원


('12년) 8.6%

→

('15년) 12.2%

→

('18년上) 14.3%



교장·교감


('12년) 24.6%

→

('15년) 34.2%

→

('18년.3월) 42.7%



정부위원회

('12년) 25.7%

→

('15년) 34.5%

→

('18년上) 40.7%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이 10의 6 초과 불가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하는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를 상시 운영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9.06.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하는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9.06.

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권고 수용 환영

▶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8.09.10.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 여성가족부가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 적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9.10.

젠더혁신 확산과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젠더혁신과 여성건강’을 주제로 여성건강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보건 의료분야에서 성(sex)과 젠더(gender) 연구 확산을 통한 여성건강 증진 방안 논의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09.12.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09.05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미혼’(未婚)은 ‘결혼을 원래 하여야 하나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비혼’(非婚)으로 변경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09.05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면서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미혼’이라는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반면‘비혼’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짐. 이에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
일·생활 균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의원 등 14인)	2018. 09.04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의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09.04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09.04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 및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막고 나아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09.03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강창일의의원 등 11인)	09.05	민간시설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의원 등 11인)	09.11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09.1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편집하는 경우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제3자에게 인식만 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공백 문제 해소 및 피해확산 방지


국 안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09.1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편집하는 경우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제3자에게 인식만 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공백 문제 해소 및 피해확산 방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09.11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업무 이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명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09.12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09.14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09.14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

본원 보도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위해 힘 모은다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 조성과 양성평등한 가사노동 및 돌봄 부담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2018.09.07]

우리사회 여성노동과 가족 삶의 변화 전반 조망하는 연구결과 공유 자리 마련

 본원의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여성·가족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여성노동 분야와 가족 분야의 연구자들과 패널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18 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18.09.13]